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2015.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2015년도 반부패 수범사례

1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 목록(20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기반 구축 노력		
1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	공무원연금공단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및 제공금지	한국동서발전
3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금지 명문화	한국수출입은행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관련 행위 제한		
4-1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조리신고지침의 적용범위를 파견근로자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4-2	교육기관 종사자(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등) 윤리행동강령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5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도 고발대상자로 확대	제주교육청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6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및 실시	근로복지공단
7	조사담당공무원의 사적 관계 사전고지 의무	국세청
8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간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한국환경공단 등
9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금지 등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한국수출입은행
11	사건관계인(직무관련자)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등	대검찰청, 경찰청
12	고위직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규정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국외여행 사전 심사(예외적 승인)	한국철도공사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14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15	부패행위자, 조사분야 보직 영구 금지	국세청
1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17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 규정 강화	한국조폐공사
18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우체국금융개발원
◇ 청렴공직자 우대 및 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19	청렴마일리지 운영 및 승진 가점화	한국남부발전
20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	대한주택보증

② 주요 반부패 수범사례 목록(54건)

지정 번호	수범사례	실시기관
◇ 부패 취약분야 종합 관리체계 구축		
1	상시 e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2	청렴담당부서에서 직원 인사 운영 시 사전검증 절차 운영	행정자치부
3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수 실시	전라북도
◇ 이해충돌 차단장치 강구		
4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에 지연, 학연 포함	교통안전공단
5	직원이 관계된 업체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제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또는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계약체결 제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퇴직 직원의 재취업 관련 행동강령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7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	"
8	퇴직자에 대한 특혜금지를 위해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	한국수력원자력
10-1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
10-2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명문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신고	공정위, 보훈처 외
11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도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의무화	인천광역시
12	재산등록 대상 확대	한국석유공사
13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인사청탁 등 금지	대구광역시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14	기술평가위원 자동선정교섭 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15	감사사례를 DB화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국화학연구원
16	홈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적발 사례 등)의 즉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
17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를 외부에 공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정보공개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관세청, 통계청
◇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구		
19	모든 수의계약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소방방재청 등
20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공주시
21	예산낭비 신고내용 조치결과 사례집 발간 및 기관 홈페이지 공개	부산,경기,충남 등
22-1	공용재산 사적 사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서부발전
22-2	부정수급 금액의 2배 환수제 도입	한국산업인력공단

23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부서단위로 확대	구 해양경찰청 등
24	업무추진비 인적사항 기재대상 집행기준을 30만원으로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	업무추진비 총액·건수 및 집행대상자 명단까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26	전체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사내포털)	한국전력공사
27	공금횡령 방지 관련 회계부정 방지대책 실시	구 안전행정부
◇ 협업을 통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28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Pool 구성·운영	경기도 부천시
29	(공사, 물품, 용역 등) 사업별 청렴지킴이 운영	제주교육청, 대전시
30	청렴시민감사관 독립성 강화 및 시정요구안 수용	공정거래위원회
31	산업재해 관련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리감독 기능 강화		
32-1	산하기관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미래창조과학부
32-2	시·자치구 감사협의회 구축·운영	서울특별시
32-3	산하기관과의 반부패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청
33	전 부서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경기도 성남시
34	산하기관(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반부패 청렴평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부패 개선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35-1	공급자 행동강령 제정·시행	한국전력공사
35-2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정·시행	한국수력원자력
36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퇴출제	한국철도시설공단
37	부패위험성이 높은 민간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	경북교육청, 국토부 등
3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한국동서발전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교육 강화		
39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이 선도하는 청렴교육 실시	국세청, 해수부 등
40-1	기관장 주관 순회 교육 실시	한국남부발전
40-2	상임감사위원 순회 교육 실시	한국공항공사
41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42-1	직무연수·훈련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전남교육연수원
42-2	직무연수 과정 중 일정 시간을 청렴교육에 배정	국가보훈처
43	비위행위자 외부위탁교육 명령 규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		
44	실무자 회의체 상시 운영을 통한 제안활동 활성화	통일부
45	고위공무원 청렴수준 자가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46	청렴결의 대회(청렴 서약식)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47	청렴알리미제 운영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48-1	반부패·청렴 Day 운영	국가보훈처
48-2	월1회 청렴의 날 지정 및 운영	부산시교육청
49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 운영	경기도
50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시행	경기도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51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 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	전라남도
52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 시효 연장(3년→5년)	한국항공공사
5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거래 관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한국조폐공사
54	비위면직자를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포함	한국전기안전공사